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구 미 시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수출기업들의

RE100 참여 확산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요성 대두

나. '22년 공모 선정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 PV, ESS, V2G 및 EV충전소 등을 연계·운전

하는 DC-Grid를 구축하여 에너지거래 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함

※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기관명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구미시	사업부지 제공(공유재산 유상허가)
민간	DC-Grid 구축 및 기술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 DC-Grid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없음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 영구시설물 :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제9호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 (2) 기간 : 2023. 12월 ~ 2024. 12월
- (3) 위치 : 3공단1로 219(동락공원 제2주차장)
- (4) 사업내용 : DC-Grid 구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거래 및 에너지
자급자족 신기술 실증
- (5) 주요시설 : PV(태양광 발전 시설 625kW), ESS(에너지저장장치 1.1MWh),
V2G 20kW 10기, EV충전기 50kW 10기

나. 운영방법

- (1) 운영주체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 (2) 운영기간 : '24 ~ '29년('24년 사업 종료 후 5년간 의무 운영)
(PV, ESS 10년 이내 2회 / V2G, EV 10년이내 1회 연장 가능)
- (3) 운영범위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공급, 전기차 충·방전 서비스
제공, 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다. DC-Grid 설치계획

- (1) (발전) PV(태양광 발전 시설) 625kW 1개소
- (2) (저장) ESS(에너지저장장치) 0.8MW 1개소, 0.3MW 1개소
- (3) (사용) EV충전기 50kW 10기, V2G 충전기 20kW 10기

라. 향후 추진계획

- (1) 2023. 11월 :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
- (2) 2023. 12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
- (3) 2023. 12월 : 사업 착수
- (4) 2024. 12월 : 사업 완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및 별표2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
- (6) 「국유재산법」 제18조
-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8)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산단혁신과 산단혁신팀 권태훈(054-480-6183)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2 생략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 8 생략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 11 생략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1 ~ 2 생략

3. 영 제9조제1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 9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라 생략

마.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2 ~ 3 생략

② 생략

□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소 관 부 서		산단혁신과
입 안 자	과 장	이 연 희
	팀 장	김 대 실
	담 당 자	권 태 훈 (480-6183)